

북한 대남전략 차원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 방안

North Korea's Provocations based on the NK's Strategic agains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ROK's Measures

강창국(혜천대학교)

차 례

1. 서론
2.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3. 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4. 한국의 대응 방안

1. 서론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를 강제 점령하고 있던 일본의 패망에 따라, 미·소의 한반도 분단정책에 의해 비롯된 6·25전쟁은 미·소 냉전의 첨예한 대립국면에서 북한 공산정권의 김일성이 스탈린의 사주와 모택동의 지원 하에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38°선을 돌파 남침한 것을, 한국군과 유엔군이 함께 개전초기에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어, 우리가 공산화되는 문턱에서 북의 기도를 좌절시킨 전쟁이다[1].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조인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6·25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2013년은 정전 60주년이 되었지만 6·25전쟁은 끝나지 않은(Not Ended) 전쟁이다.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6·25전쟁 이후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고 3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당사국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보유하여, 군사력 우위를 기초로 대남 통일 선전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는 심화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전술 및 군사전략에 대하여 살펴 본 후,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즉 대남도발의 사례를 연대별, 집권 정부별로 살펴보고 이를 분석해 본 후 대남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6·25전쟁 관련 1·2차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선행연구 자

료, 국방부에서 수집·정리하여 간행한 공간사(公刊史), 육군본부의 대남도발과 테러 관련 논문이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2.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2.1 북한의 대남전략과 전술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혁명전략은 남조선혁명론이다. 이 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실행된 대는 196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전국적 혁명의 승리라는 이른바 조선혁명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이는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의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김일성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2]. 여기에는 전체 조선혁명이 남조선혁명→조국통일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달성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혁명세력을 지원하여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케 하였으며, 1969년 8월 25일에는 당중앙위원회를 창립시켰다. 1950~1960년대 매우 공세적이던 북한의 대남전략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북한 자체의 역량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의 객관적인 환경으로 인해 대남접촉이 오히려 북한체제에 위협을 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냉전시기였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는 자본주의권과 사회주

의권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북한의 경제위기도 현상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남조선혁명론이라는 공세적인 적화전략적 관점에 기초해서 전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외교적 고립, 내부 경제 자원의 고갈이라는 총체적 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으로부터의 경제지원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생존조건으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생존조건이 내부 보다는 외부에 있으며, 그것도 과거에 적이었던 서방권에 상당부분 의존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환경 변화는 오늘날 북한의 대남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도발을 위한 책임조직과 행동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부대와 같은 성격의 조직인 북한의 테러리즘 책임조직은 상황에 따라 테러리즘 행동조직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 조직은 실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3].

2009년 2월, 북한의 노동당 작전부(대남간첩 침투)와 36호실(해외 공작임무)이 인민무력부 산하 경찰국과 통합하면서 ‘경찰총국’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남공작의 총본부인 셈이다. 전술차원의 테러리즘 책임조직으로서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에서는 직접침투, 해외공작, 대일공작, 대남심리전 등을 담당하고, 정치보위부와 사회안전부에서는 북한 내의 테러리즘을 지휘하며, 인민무력부는 대남도발 및 해외 테러리즘을 자행하거나 지원한다. 북한의 테러와 대남도발을 수행하는 기구인 노동당이 계획-지휘를 담당하고 인민무력부가 실행한다.

2.2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배합전략)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된 기계화 부대를 고속으로 종심(縱深)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증원과 교두보 확보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4]

첫째, 북한의 선제기습전략은 4대 군사노선을 토대로 하는 전략으로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 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장비의 집중 및 전진배치 동향 등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는 북한은 선제기습전략을 기본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전 후방 동시공격 능력과 고속 중심공격 능력, 선제기습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경제난 가운데서도 무기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속전속결형 공세적 군사전략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로서의 비대칭 억지전략을 병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기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증강, 고속 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이 속전속결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화되고 인적 물적자원이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배합전략이란 모택동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인데,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고착시켜 두고, 후방에서는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인민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말경부터 북한에서는 갱도진지 건설 지시가 하달된 데 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대통로(땅굴)작업을 명령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베트남전 사례처럼 땅굴 침투부대와 지하당 세력이 연계되도록 하여 불의의 기습으로 상대측의 응전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광산갱도와 지하 대피호를 포함해 8,200여 개소의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북한의 군사력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표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구분			한국	북한	
병력 (평시)	육군		50.6만여 명	102만여 명	
	해군		6.8만여 명 (해병대 2.8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계		63.9만여 명	119만여 명	
주요 전력	육군	부대	군단(급)	12(특전사 포함)	15
			사단	46(해병대 포함)	88
			기동여단	14(해병대 포함)	72(교도여단 미포함)
		장비	전차	2,400여 대(해병대 포함)	4,200여대
			장갑차	2,700여 대(해병대 포함)	2,200여대
			야포	5,300여 대(해병대 포함)	8,600여대
			다련장/방사포	200여문	4,800여대
			지대지유도무기	30여 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120여 척	42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3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3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60여 대	820여 대	
		감시통제기	5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	40여 대	330여 대	
		훈련기	19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80여 대	300여 대	
	예비병력			320만여 명 (사관후보생, 전사근로소집, 전환/대체복무인원 등 포함)	770만여 명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 공격 수단으로서 한국군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국방위원회 예하에는 총정치국, 총참모부, 임민무력부가 있으며 상호 병렬적인 관계이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외교, 군수, 행정,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한다.

북한의 군사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지상군, 해군 및 공군, 예비전력 및 전략무기, 전장지속 능력을 설명한 후, 남북한 군사력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북한의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 9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총국, 11군단, 전략로켓사령부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5].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방지역의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안지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방사포 전력뿐만 아니라 상륙 및 공중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우리의 서해 5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상시 도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의 2개 함대와 13개 전대 및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전력의 약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상시 기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해군은 지형상 동·서해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융통성 있는 작전이 제한되고,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북한의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 공군기는 대부분 노후 기종이지만 전투임무기 82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 공군은 추가적인 항공기의 배치 조정 없이 우리의 핵심 지휘통제 시설, 방공자산, 보급로, 산업 및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기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저고도 침투 능력이 우수한 AN-2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아군 후방의 주요 전략시설에 특수전부대를 직접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4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여, 1960년대에는 구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기술

을 추적하여 왔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하였고, 1980년대에는 5MWe급 원자로(제2원자로)를 건설하였다. 1986년에 우라늄 전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1989년에는 태천에 20MWe급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하였고,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2년 1월 IAEA·북한간 핵사찰 협정,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핵합의가 있었지만 이들 모두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

하는 데 실패하였다[6].

북한은 NPT에 1985년 12월에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에 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한은 IAEA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으며, 자신에 대한 적대적 음모에 연계되었다고 주장하며 IAEA와의 협조를 거부하였다. 이에 IAEA는 4월 1일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이관하며 유엔의 제재를 강력히 시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에서는 5월 11일 결의안을 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IAEA 요구에 응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결의하지 않았다.

표 2. 북한 핵무기 개발 및 생산 활동 경과

구분	연도	월 일	핵무기 개발 및 생산 활동
배경	1962	1	구 소련의 지원으로 IRT-2000형 원자로 건설
	1874	9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85	12.12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가입
	1991	12.3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1차 위기	1993	2.10	IAEA, 미신고시설 2개소 특별사찰 수용촉구(5일 후 거부)
		3.12	북, NPT탈퇴 입장 표명
	1994	6.13	북, IAEA 탈퇴선언 제출
		6.15	카터 전 대통령 방북(고위급회담 재개 제외)
		7.8	제3차 고위급회담(제네바)
		10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체결, 북, 핵동결 선언
	1995	3.9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정 서명
2차 위기	2002	10	캘리 미국 대통령 특사 평양 방문, 북한의 핵개발 의혹 제기
		11.14	KEDO 대북 증유지원 중단 결정
	2003	12.27	북, IAEA 사찰단 추방선언
		1.10	북, NPT탈퇴선언
		2.12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
		4	베이징 3자회담 개최(북, 이근 대표 핵보유 시인)
		8	베이징 제1차 6자 회담
	11.21	KEDO, 대북 경수로 사업 1년간 중단 발표	
	2005	9.19	제4차 6자 회담: 9.19공동성명 발표(북-핵포기, 미-평화공존보장)
		9	미국, 북한산 위조 달러에 대한 강경조치 - 금융제재(거래중지, 계좌 동결)
	2006	7.5	북,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10.9	북, 1차 핵실험(함북 길주군 풍계리) 강행
	2007	10.14	유엔 안보리(UNSC),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 통과
		2.8~13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베이징) 미·북간 베를린 회담 결과 설명 등
		9.11~15	미·중·러 핵전문가 대표단, 영변 핵시설 방문
	2008	9.27~30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베이징), 비핵화 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서)
		1.4	북 외무성, 북핵관련 담화문발표, 우라늄 농축의혹 및 시리아 핵협력시설에 대해 부인
		6.27	영변 5MWe 원자로 냉각탑 파괴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 성급 미 국무부 한국 과장, 6월 27일~28일 북한 방문, 냉각탑 폭파 참관
		8.26	북 외무성, '8월 14일부터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 고려' 발표
		9.19	북 외무성, '영변 핵시설 복구 중' 발표
2009	2.2	북한 총참모부, 한반도비핵화관련 성명, 한반도비핵화는 한반도전역 검증통제 실현 등	
	4.5	북한 조선중앙통신,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은하 2호에 실어 발사하였다' 보도	
	5.25	북한, 2차 핵실험(함북 길주군 풍계리, 진도 4.5) 실시	
	6.12	UNSC,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	
	7.4	북, 스킨드 5발, 노동 2호 발사(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2010	11.3	북 조중통, '폐 연료봉 재처리 완료' 발표	
	5.12	북 노동신문, '자체 기술로 만든 핵융합 반응 성공' 주장	
	7.9	UNSC,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은 만장일치로 채택	
	8.8	노동신문,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 핵 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 나갈 것"	
	3.6	북 조선중앙통신, 광명성 3호(장거리미사일) 발사계획 발표 및 ICAO에 낙거기검 통보	
3차 위기	2012	3.26~27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세계 53개국 정상, 4개국 국제기구대표 참석 핵물질 제거 및 최소화 등 핵 안보 국제협력체제 발전 방안 논의)
		4.13	북한 동창리(평북 철산군) 발사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
		12.12	북한 조선중앙통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궤도전입 보도
	2013	1.23	UNSC,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 채택
		2.12	북한, 3차 핵실험(함북 길주군 풍계리, 진도 4.9) 강행
		3.7	UNSC, 3차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

출처 : 국방부, 2012. 『2010 국방백서』, pp.273-282; 강창국, 2008.1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정과 대응책 모색" 『軍史』 제69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346; 김선일, 2012.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에 관한 고찰" 『軍史研究』 제133집(육군군사연구소) pp.295-296; Chosun.com (2013.5.15) 재청리.

제네바 핵합의 틀 속에서도 북한이 비밀 핵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새로운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여 핵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바 있다. 북한의 2006년 10월 9일, 2008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등 3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생산 활동 경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3.1 정전 후 연대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정전 이후 북한군 측이 위반한 건수(유엔사측 작성)는 공중 110건, 해상 104건, 지상 425,057건 등 총 425,271건에 이른다. 북한군은 유엔군측이 공중 2,399건, 해상 1,269건, 지상 831,895건 등 총 835,563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1950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협정의 준수는 고사하고 육상, 해상, 공중으로 200여 건의 주요 위반 사건이 있었다. 정전 후 북한의 연대별 지

표 3. 정전후 연대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8]

구 분	북한의 대남도발(지상·해상) 사례		비 고
	지상(내륙) 무장공비 사건	해상(해안) 무장공비 사건	
1950년대	1954.8.25 충남 천안 1955.5.22. 전남 장성 1956.1.7. 경북 청송 1956.6.14. 경북 월성 1956.7.12. 전북 정읍 1956.8.8. 강원 영월 1957.7.1. 경기 가평 1958.4.28. 경기 파주 광탄 1958.5.20. 경북 포항 1958.6.8. 경기 고양 1958.6.13. 강원 김화 간첩귀순 1958.6.24. 강원 춘성 1958.9.15. 경기 강화도 1958.10.12. 경기 파주지역 1958.11.4. 경기 입진강 1959.5.30. 경남 산청 1959.6.17. 경기 양주군 마차산 1959.7.22. 대구 팔공산 1959.8.4. 전북 부안 1959.8.30-8.31 경기 파주·양주	1957.4.16. 경기 연평도 어선납치 1957.7.24. 경기 연평도 무장간첩선 1957.11.9. 강원 거진 어선납치 1958.4.29. 경기 연평도 어선납치 1958.7.10. 강원 속초 근해 1958.9.8. 경북 울릉도 근해 1958.9.17. 경기 소연평도 1958.11.18. 경기 아산만 입파도 1958.11.24. 강원 거진 근해 1958.12.6. 강원 고성 어선납치 1959.7.19. 충남 서산 서해안 용도 1959.7.24. 경기 소연평도 1959.8.8. 경기 서해 휴전선 1959.8.18. 서해 비압도 1959.11.13. 동해상 어선납치 1959.11.26. 서해 침투	이승만 정부 (1953-1960)
1960년대	1961.3.24. 경기 파평산 1961.11.3. 경남 거제도 1963.7.30. 경기 파주 1966.9.1. 서울 1967.6.27. 강원 영월 1967.7.19. 전북 정읍 1968.4.3. 충남 서산 1968.7.29. 전남 목포시 허사도	1964.8.8. 남해군 당포리 1969.3.16. 강원 주문진 1969.6.8. 강원 북평 1969.6.12-17. 흑산도(1) 1969.6.14. 전북 부안 1969.7.24. 전남 흑산도(2) 1969.9.20. 군산 오식도	박정희 정부 (1961-1979)
1970년대	1970.4.8. 경기 파주 1970.6.22. 현충문 폭파 1971.9.17. 경기 김포 1973.5.5. 전남 금당도 1974.5.20. 제주도 추자도 1975.4.27. 부산 1975.6.28-8.1. 광주-전북 원주	1970.11.8. 인천 울도 1975.9.3. 전북 부안·고창지역	
1980년대	1980.3.27. 제15사단 DMZ 1981.6.29. 제28사단 필승교 1983.6.19. 제101여단 문산 임월교 1984.9.24. 대구 간척 주민 살해	1980.113. 전남 황간도 1980.12.1. 경남 남해도 1982.5.15. 강원도 저진해안 1983.8.4. 경북 월성해안 1983.8.13. 독도 근해 간첩선 1983.12.3. 다대포근해 반잠수정 1985.10.19. 부산 청사포 간첩선	전두환 정부 (1980-1987) 노태우 정부 (1988-1992)
1990년대	1992.5.21. 제3사단 DMZ 1995.10.24. 충남 부여 무장간첩 1997.7.16. 제3사단 GP 교전	1995.10.17. 임진강 무장공비 1996.9.18. 강릉해안 잠수함 1998.6.22. 속초해안 잠수정 1998.7.12. 동해시 무장공비 1998.11.20. 강화도 간첩선 출현 1998.12.17. 남해 반잠수정 1999.6.15. 제1연평해전	노태우 정부 (1988-1992) 김영삼 정부 (1993-1997) 김대중 정부 (1998-2002)
2000년대	-	2002.6.29. 제2연평해전 2009.11.10. 대청해전 2010.3.26. 천안함 폭침사건 2010.11.23.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박근혜 정부 (2013.2-10월말 현재)

출처: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對非正規戰史 (1945-1960)』,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12); 국방군사연구소, 『對非正規戰史 II (1961-1980)』,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對非正規戰史 III (1981-2000)』,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8); 조선일보, “대청해전.” (조선일보, 2009.11.17), A6면 참조·재정리.

상 및 해상을 통한 주요 대남도발 사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7].

1950년대에는 6·25전쟁 직후라서 또다시 재래식 전쟁, 즉 전면전을 치르기 보다는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958년 민항기 납북 사건이 그 예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남도발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시기이다. 항공기 납치와 어선 납치, 김신조 일당의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 등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북한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려 보자는 정책을 구사한 시기이다.

1980년대에는 대남 도발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1983년 미얀마 랑군 에서 진두환 대통령 암살 기도,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앞서게 되었다.

1990년대 초기에는 대남도발이 소강상태였으나 중·후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이 자행되었다. 1996년 강릉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 1998년 속초해안 잠수건 침투 사건과 남해 반잠수정 침투 사건, 1999년 6월 제1연평해

전 등이 있었다.

2000년대에는 북한의 의도적, 직·간접적 대남도발이 있었다.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등이 있었다.

3.2 정전 후 집권정부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정전 후 집권정부별 북한 대남도발 사례를 요약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승만 정부(6·25전쟁 이후 1953~1960)는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북한은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을 시작했다. 1958년 민항기 납북 사건을 비롯하여 20건의 지상(내륙) 무장공비 사건, 16건의 해상(해안)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1961~1979)는 북한과의 본격적인 체제 경쟁적 시기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의 대남 도발이 많이 자행된 시기이다. 항공기 납치와 어선 납치,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 등이 있었으며, 대통령을 살해하여 북한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를 혼란 속에 넣어보려던 시기이다.

진두환 정부(1980~1987)는 대남 도발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1983년 미얀마 랑군 에서 대통령 암살 기

표 4. 정전 후 집권정부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9]

연대	집권 정부	남북 관계	대남도발 사례	대남도발의 특징
1950	이승만 정부 (1953-1960)	적대적	1958.2.16. 민항기 납북 • 지상(내륙) 20건 • 해안(해상) 16건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 시행기 계속적·주기적인 대남도발 사건 다수 자행
1960	박정희 정부 (1961-1979)	적대적	1968.1.21. 대통령 암살기도 1976.8.18. 판문점 도끼만행 • 지상(내륙) 15건 • 해안(해상) 9건	남·북한 체제 경쟁기 본격적인 대남도발 자행기 조직적·의도적 대남도발 자행기 항공기·어선납치, 대통령암살기도
1970			1983.10.9. 미얀마 랑군에서 대통령 암살 기도 1987.11.29. KAL기 폭파 • 지상(내륙) 4건 • 해안(해상) 7건	대남도발 사건의 절정기 한국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1980	진두환 정부 (1980-1987)	적대적	• 어선 피랍 4건 • 무장침투 1건	대남도발 소강기 대남도발 사건 소수 발생
1990	노태우 정부 (1988-1992)	적대적	1996.9.18. 동해안잠수함 침투 • 지상(내륙) 2건 • 해안(해상) 3건	대남도발 지속기 계속적·주기적인 대남도발
2000	김대중 정부 (1998-2002)	우호적	1999.6.15. 제1연평해전 2002.6.29. 제2연평해전 • 해안(해상) 4건	의도적·대형화 대남도발기 우호적인 남북관계와 무관한 도발 자행
	노무현 정부 (2003-2007)	우호적	2006.10.6. 1차 핵실험	간접적 대남도발기 대남 테러리즘 거의 없음
2010	이명박 정부 (2008-2013.2)	적대적	2008.7.11. 금강산관광객 피격 2009.5.25. 2차 핵실험 2009.11.10. 대청해전 2010.3.26. 천안함 폭침사건 2010.11.23. 연평도 포격사건 2013.2.12. 3차 핵실험	의도적, 직·간접적 대남도발기
	박근혜 정부 (2013.2.25 ~현재)	적대적	2013.4.8. 개성공단 잠정중단 2013.7.6. 개성공단 1차실무회담 2013.8.14 개성공단 7차실무회담 (정상화 합의)	의도적 대남관계 긴장조성기

출처: 김태준, 2006. 『테러리즘-이론과 실제』, (봉명), p.437; 조선일보, 2009.9.9. “과거 북한의 유감 표명 사례”, A4면; 조선일보, 2009.11.11. “북 NLL 침범...남, 북경비정 격퇴”, A1면; 조선일보, 2009.11.17. “대청해전”, (조선일보, 2009.11.17) A6면, 참조, 재정리

도,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앞서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1988~1992)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랍되었던 4건의 어선이 전원 귀환하였으나 1건의 무장침투가 있었다.

김영삼 정부(1993~1997)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서해상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1연평해전이 벌어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7)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대남 도발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013.2)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사망에 이어,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2009년 11월 10일에는 대청해전이 발생하였다. 2011년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였다.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박근혜 정부(2013.2.25~현재)는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8일에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7월 7,10,15,17,22일 등 5차례 걸쳐 당국간 실무회담을 실시하였으나 8월 14일에 재가동 조건을 합의하게 되었다.

3.3 한국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의 군사도발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있으나 지난 60년 동안 북한 스스로가 NLL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한편, 그 규범을 준수해 왔다.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 시 접촉지점을 NLL선상으로 하기로 합의했고, 2002년 및 2003년 나포·좌초된 북한 선박을 NLL상에서 북한에 인계하였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도 NLL을 인정한 점 등이 그 증거이다[10]. NLL은 남북간의 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지역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해이다. 또한,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전협정과 이후부터 현재까지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인 관

리를 위해서 설정된 선으로서 우리가 관할해왔고 해상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해왔다. 또한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도 NLL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NLL 설정을 수용하고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이른바 '서해사태'를 유발시켰다. 북한은 1977년 7월 1일에는 200해리 경계수역을 설정하였고 그해 8월 1일에는 '해상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쌍방의 관할구역에 합의,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NLL을 침범해왔다. 특히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10일의 대청해전 등 세 차례에 걸친 남북 간 무력충돌은 북한이 NLL을 침범하여 한국해군 함정을 공격함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NLL 이남의 우리 해역에 잠수함을 침투시켜서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도발을 일으켰다. 북한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침몰시켰으로써 승조원 104명중 46명이 전사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의 민가와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에 포격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NLL 남쪽에서 행해진 우리군의 사격훈련을 빌미로 방사포 사격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한국군의 응사로 50분간의 교전이 벌어졌고 해병대원이 전사하고 민간인이 포탄공격으로 희생되었다.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에 처음으로 포탄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간인이 포격으로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3.4 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의 행태와 특징

정전 후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은 지속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지닐 정도로 위협의 강도가 높았던 위기도발이 거의 20회 정도 발생하였다[12]. 대남도발의 행태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은 군사적 습격, 무장간첩 침투, 요인암살 저격, 잠수함 침투, 땅굴 굴착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1960년대 전반기까지는 군사분

계선을 연하는 지역에서 주로 군사적 습격과 납치를 감행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기에는 군사적 습격뿐만 아니라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게릴라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이 강화된 이유는 북한이 월남전 형태의 게릴라전을 한국 내에서 감행하여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무력적화전전략이 실패하자, 1970년대에는 소규모의 무장간첩을 계속 침투시킴으로써 한국 내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면서 반미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기도발들 감행하여 심리적 공세를 전개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의 격상으로 북한은 상대적 열세에 대한 불안감을 만회하고 한국의 발전에 대하여 계동을 걸기 위해 국제적 테러를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위기도발의 유형을 살펴보면 군사적 정면충돌, 무장 게릴라 침투, 무장간첩에 의한 습격이나 테러, 땅굴 굴착과 같은 잠재적 위협 등으로 앞에서 설명한 군사적 도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위기의 요인은 직접적·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심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위협의 대상으로서 군사적 목표, 정치적 지도자, 일반 시민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을 노출시켰다. 위협의 정도 면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례는 청와대 기습사건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상대적으로 위협의 정도는 낮았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의 대응이 강경했던 점에서 기인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위기구조가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구조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와 강도는 김정일 체제는 물론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안겨줄 만한 강도 높은 위기사건만을 중심으로 북한 군대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 그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북한의 주요 위기도발 양상은 남북한 관계가 침예한 대립을 이루거나 화해국면에 들었을 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4. 한국의 대응 방안

4.1 한국의 안보정책·안보전략 기초 유지와 한미동맹의 발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안전 및 국가번영의 기반을 구축하며, 국제적 역량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1].

첫째,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방위역량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달성한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한·미 공동의 가치와 이익,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능력을 확충하며,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 유지와 재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6·25전쟁을 계기로 혈맹관계로 발전하여 1953년 공식적인 한미동맹이 출발한 이후 2012년 한미동맹이 기존의 군사·안보분야에서 경제·사회 분야로 확대되어 다원적 전략동맹이 되었으며, 2013년 5월 7일에는 한미정상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성격이 ‘신뢰동맹’, ‘가치동맹’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 즉 ‘핵심축’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2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시행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전략적 도구로서 북한의 테러와 대남도발이 가능해지고 있다. 대테러(Combating Terrorism)란 테러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활동을 하거나 테러사건 발행 이후에 취해지는

대응활동의 체계적인 수단 및 방법을 말하는 바, 테러 위협에 대한 대테러전략은 테러를 사전적 저지·예방하는 방어적 대테러(Counter-Terrorism) 전략과 테러를 제압·대응하는 공세적 대테러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방어적 대테러전략과 공세적 대테러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① 국제적·국가적인 첩보 및 정보에 의한 테러위협 분석 및 협조, ② 국가적 전략시설 및 장비로써 국가통치 및 C4I 체계, 교통기관, 전력시설, 댐 시설, 대형건물, 유류 및 가스시설, 국방시설 그리고 개인 대중보호 등에 대한 위협상태 및 취약점 평가, ③ 인원보안, 시설방호, 경계 및 대처 교육훈련의 예방활동, ④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제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4.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대응

북한은 아직 우리에게 이중적인 존재이다. 화해의 대상인 “민족(통일 동반자)”이라는 얼굴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주적(안보위협)”의 얼굴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핵개발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기본이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신전략 수립 또는 한국형 전략무기 개발 등 필요한 국가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3]. 2001년 9·11 테러 이후 북한과 같은 테러를 지원하는 이른바 “불량 국가들(rogue states)”이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무장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면서, 이른바 「악의 축(an axis of evil)」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북한을 명시적 위협국으로 지적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세계 제일의 탄도미사일 제공국가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이 전반적인 핵 기술의 보유를 인정하게 만들었으며, 2009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1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1718호) 보다는 2차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결의안(1874호)에 더욱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3차 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결의안(2094호)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4.4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의 지속적 수행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올바른 통일관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 그리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한다. 지난 세기 공산주의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정치체제임을 확인했다. 경제체제로는 시장경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화의 분배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제도인 것도 확실하게 되었다.

둘째, 북한 실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환상을 가지고 대하거나 폄하하거나 상대방에게 유화의 성격을 보일 목적으로 실체를 외면하고 미화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 남북 간에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호혜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온당한 목표를 세웠다면 함께 상호작용 해야 할 대상의 내면과 속성, 그리고 본질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안보와 대북 포용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약속과 믿음을 저버리고 국민 안전과 신변에 위협을 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기본 원칙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넷째,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의 통일 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 통일 의지와 통일 정책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통일을 실천해나갈 역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칠 수 있다.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통일된 한국의 존재가 그들의 국가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분명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창국, “무기운용으로 본 6·25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2] 로동신문 (1965.4.17).
- [3] 구광모, 『북한의 테러 전략』, 『국제정치논집』 24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4.
- [4]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 [5]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 [6] 김선일,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에 관한 고찰” 『軍史研究』 제133집, 육군군사연구소, 2012.
- [7] 최진태, “북한 테러리즘” www.trriorism.or.kr (2010.4.18).
-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對非正規戰史』 (1945~1960), 1988.
-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對非正規戰史』 (1945~1960), 1988.
- [10] 조선일보 (2003.11.15, 2009.9.9, 2009.11.11, 2009.11.17, 2013.7.26).
- [11] 조영갑, 『국가안보학』, 선학사, 2006.
- [12]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6집, 합참정보본부, 2003.
- [13] 홍관희, 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 안보, 제12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논문집(2003.10, 23-24), 육군사관학교, 2003.

저자소개

● 강 창 국(Chang-Kook Kang)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영문학사)
- 국방대학교(안보학석사)
- 충남대학교(경영학석사)
- 중앙대학교(영어 교육학석사)
- 경기대학교(국제정치학박사-외교안보)
- 국방부 획득개발국(1993~1995. 육군소령)

- 한미연합군사령부(1995.2~2000, 서기관)
-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3급 정학예사)(2002~2007.2) 근무
- 2007.3~현재 : 혜천대학교 교양교직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전시연출(문화), 전쟁과 무기, 군사영어, 국가안보와 북한 군사